

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확장 재정 ‘백신’ 처방 필요”

코로나19 극복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무슨 얘기 나왔나

‘한국판 뉴딜’ 성장 토대 마련
1·2차 넘은 3차 추경 6월 처리
빠 짚는 지출 구조조정 필요
“국가 채무비율 건전” 자신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약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전시’라는 말까지 하면서 확장 재정 운용을 시사한 것은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상황에선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확장재정이 경제위기에 대한 치료제이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기 극복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넉넉히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확장재정 기조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약화를 염려하며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에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무는 고경돼 있는데 GDP가 줄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다”며 내수 진작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참석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총 2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4%로 빠르게

상승했다. 30조~4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비율은 44.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당초 계획한 60조2000억원에서 사

상 최대인 72조3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늘었는데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0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언급 ‘검은그림자’는?

“수년째 털어도 아무것 없었다”
한명숙 사건 계기 檢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으로 향하는 ‘검은 그림자’가 무엇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여론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수년째 들여다 봤으나 재단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는 “검찰이 앞으로 계속 털어도 털릴 게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사에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되곤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노

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인사가 또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등 온갖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TV조선은 ‘한 언론이 민주당 유권영 국회의원 당선인의 노무현재단 차명계좌 운영 의혹을 취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이 대표의 ‘검은 그림자’ 언급과 연결 지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의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계좌 운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이 대표의 발언과 연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노무현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은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제기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발언이 특정한 ‘공작’ 의혹을 염두에 뒀기보다는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 행태를 꼬집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했나”

2차 기자회견서 정의연 재차 비판
“윤미향,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

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을 향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연 2차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에 가만 생각하니 정산대책협의회가 정산대 문제만 하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느냐”며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들이 일본의 사죄 배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 등 윤 당선인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첫 기자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

왔다”면서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특히 윤 당선인에 대해 “사리사욕을 채워서 마 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며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뺨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을 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뺨개 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마와 관련)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 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더 하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특히 “만가

지를 속이고 이용하고...제가 맡은 다 못 한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사람(되놈)이 챙긴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지난 1차 기자회견 이후 눈병이 처럼 불어난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남구 한 찻집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수요집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윤미향 의혹, 사실 규명이 우선” 재확인

“할머니 문제제기 송구
정의연, 적극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의연(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의혹 제기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 온 이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정의연이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의 자체 조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판단된 이후에 입장을 내놓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의 실제적 진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윤 당선인의 거취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

란에 대해 “건건이 대응하지 말고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관계 부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 당선인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까

부터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입장 표명 계획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연합뉴스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는 전라도와 **상생합니다**

서울특별시

한창 바쁜 농촌, 일손 구하기 어려우시죠? 서울시가 구인을 도와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형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서울시민을 연결해드립니다.
서울시가 근로자의 교통비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 그 외 인건비는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참여방법 소속 군청을 통해 서울시에 접수

코로나19, 함께 막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의 | 관할보건소 또는 1339